아시아리뷰 제9권 제1호(통권 17호), 2019: 265~287 https://doi.org/10.24987/SNUACAR.2019.08.9.1.265

경제적 낙관주의와 복지 태도: 동아시아 3국의 사례*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경 애리조나대학교 사회학과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복지 태도, 재분배 선호, 계층 이동성, 동아시아, 정치 경제

I. 서론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그동안 비교 복지국가 연구에서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발전주의 복지국가 또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등의 명명을 갖고 유형론적

*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기획 과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 선호와 복지국가〉 보고서 일부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6657).
** 교신 저자

(typology) 접근을 취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축적의 성과에 비해, 수요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복지 태도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교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정책 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 태도와 복지 정책 선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책 시장(political and policy market)에서 수요자의 심리와 정치경제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재분배 선호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이론들과 경험적 발견들을 축적하여 왔다. 1960~1990년대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21세기에 접어들어 미시적 연구로 초점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개인 수준의 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졌던 것이다. 이 논문은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경험적 준거로 한 연구들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복지 태도를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는 최근 정치경제 연구에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기대소득(expected income)과 현 시점에서의 재분배 선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Rueda and Stegmueller, 2019)의 연장선에 있다. 동아시아 시민들은 미래 기대 소득 또는 미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현재 복지 태도가 영향을 받는가?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 중간층,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 소득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인식하는 계층 이동 가능성 또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주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이론적 주장은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재분배 선호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모네와 월러슈타인(Moene and Wallerstein, 2001; 2003)의 중요한 주장의 연장선이다. 복지국가의 기능은 크게 보아 보험과 재분배이다.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에 따르면, 위험을 상수로 놓았을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 보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감소한다. 보험은 소득이 높아

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감소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계층별 차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간략히 서술하고, 경제적 낙관주의와 사회 보호 및 재분배 선호에 관한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III장은 자료와 변수를 소개하며, IV장은 경험적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V장은 결론이다.

II. 경제적 낙관주의, 사회 보호, 그리고 재분배 선호

1. 사회 정책 및 재분배 선호 연구

개인 수준의 연구를 통해 복지 및 재분배 선호를 연구한 정치경제 문헌들은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다. 크게 분류하자면, 소득(income)과 위험(risk),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위험이 클수록 복지와 재분배 선호가 높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 결정 요인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이 가져오는 차이 또는 개인 수

준의 다른 매개 변수들의 효과 등을 탐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과 복지 태도의 관계는 고전적 모형인 로머(Romer, 1975) 모델과 멜처-리차드(Meltzer and Richard, 1981) 모델로부터 출발한다. 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의 유권자는 높은 조세율과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한다. 다수제 선거에서 결정적 투표자인 중위 소득(median income) 투표자의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불평등이 높을수록 더더욱 높은 수준의 재분배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반화하자면, 저소득층에서는 재분배를 선호하고, 고소득층에서는 높은 조세율을 부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하게 된다. 다른 한편, 위험은 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을 가리킨다. 실업 상태 또는 실업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유형이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산업 특정 기술(specific skill)일 때, 전이성이 높은 일반 기술(general skill)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실업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Iversen and Soskice, 2001). 또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 경우, 실업에 대한 위험도를 더 높게 느끼게 된다(Rehm, 2016). 이 경우 모두 높은 수준의 위험은 높은 수준의 사회 보험 및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연결된다.

소득과 재분배 및 복지 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들은 왜 어떤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여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는가와 왜 어떤 고소득층은 재분배를 지지하는가라는 경험적 퍼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설명들을 제시해 왔다. 첫째, 비물질적 요인들의 매개 효과이다. 대표적으로, 샤요(Shayo, 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강한 저소득층일수록 그들의 낮은 계급 정체성(저소득층) 지위에 비해 높은 사회적 정체성(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바탕해서 정책 선호가 형성되고, 이는 낮은 수준의 재분배 선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에서는 그들의 계급 정체성의 사회 내 지위가 이미 높기 때문에 그에 조응하는 선호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 낮은 재분배 선호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회 네트워크 효과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원이 아닌 저소득층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에, 저소득층 노동조합원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고 그에 따라 정책 선호가 형성된다는 것이다(Mosimann and Pontusson, 2017). 셋째, 고소득층에서 사회 보호 및 재분배를 선호하는 현상에 대한 퍼즐은 대체로

타인을 고려한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s)의 이론틀로 설명되어 왔다(Dimick et al., 2018). 불평등이 높을수록 공정한 분배 정의의 규범을 내면화한 고소득층의 선호(Finserras, 2009)로 설명하거나, 범죄율 증가와 같은, 불평등이 초래하는 외부 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서 복지 확대나 재분배 확대를 지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Rueda and Stegmueller, 2016). 넷째, 미래 소득에 대한 예측이다. 현재 소득보다 미래 기대 소득이 현재의 정책 선호(특히, 조세율이나 재분배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층 상향 이동성(prospect of upward mobility) 가설이라는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Benabou and Ok, 2001). 미래에 계층 상향 이동을 기대하는 경우, 현재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 분포상 위치와 상관없이 재분배 선호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다(Alesina and Ferrara, 2005).

최근 들어 복지 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구의 관심은 주로 소득이 복지 태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서구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저소득층이 더 높은 복지 선호를 나타내는지 등이다. 한국 시민들의 복지 태도는 소득과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김영순·여유진, 2011), 소득과 부채 모두를 감안하여 순자산이 중요하다는 연구(김항기·권혁용, 2017),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결합하여 소득-자산 상호작용 효과가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철승 외, 2018) 등이 제시되었다. 또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화와 관련하여, 더 높은 노동시장 위험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 보호 선호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이주희, 2014; 권혁용, 2019).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개인 수준에서 복지 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계층 이동성 인식과 정책 선호

이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계층 상향 이동성 전망(prospect of upward mobility)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 보호 및 재분배를 덜 지지할 수 있다(Benabou and Ok, 2001). 이는 특히 왜 어떤 저소득층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여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는가라는 경험적 퍼

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오늘은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내일이 되면 상향 이동하여 중간층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한번 결정되면 상당히 경로 의존적인 것이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야 하는 재분배 및 복지 관련 결정에 대해 내일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미래의 기대 소득 또는 미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재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의 이론적 주장은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재분배 선호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 소득(expected income)과 현 시점에서의 재분배 선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Rueda and Stegmueller, 2019)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모네와 월러슈타인(Moene and Wallerstein, 2001; 2003)의 중요한 주장의 연장선이다. 복지국가의 기능은 크게 보아 보험과 재분배이다. 모네와 월러슈타인(2003)에 따르면, 위험을 상수로 놓았을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 보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감소한다. 보험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감소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가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층별 차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 절에서 우리의 가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III. 자료와 변수

이 연구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 자료를 활용한다. 세계가치조사 6차 조사에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분석에 필요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조사는 2010년, 대만 조사는 2012년에 실시되었다. 다만, 아래에 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몇 가지 문항에 대한 질문 문항은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나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자료의 문항과 정확히 조응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서구 민주주의를 경험적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분석 결과가 다른 자료를 분석했을 때에도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복지 태도인데, 두 가지를 사용한다. 하나는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이고, 다른 하나는 재분배에 대한 선호이다.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측정한다.: "다음의 이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정부에서는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제공받도록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분배 선호에 대한 측정은 다음의 질문을 활용한다. "다음의 이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소득이 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두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즉, 10에 가까울수록 위의 진술에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표 1은 동아시아 3개국 응답자들의 복지 태도의 분포를 보여 준다.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지지하는 응답 비율(1~10점 척도에서 6~10으로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82.4%와 80.5%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만은 그 비율이 5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분배 선호는 전반적으로 사회 보호 선호에 비해 지지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한국 응답자의 32.2%, 일본 응답자의 57.8%, 그리고 대만 응답자의 42.5%가 재분배를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일본이 가장 높은 지지 비율을 나타내었고, 한국이 세 국가 중 가장 낮

표 1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

	사회 보호 선호		재분배 선호	
	반대(1~5)	지지(6~10)	반대(1~5)	지지(6~10)
한국	17.6%	82.4%	67.8%	32.2%
일본	19.5%	80.5%	42.2%	57.8%
대만	45.4%	54.6%	57.5%	42.5%

자료: Inglehart et al.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Six* (Madrid: JD Systems Institute).

은 재분배 지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소득은 세후 가구 소득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다음의 문항을 사용한다: "귀하 나라의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을 1로, 가장 높은 소득 집단을 10으로 나타내었을 때 가구 구성원의 임금, 연금 소득, 그리고 모든 다른 소득을 합해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 문항을 사용하여 1~3구간이라 응답한 경우 저소득층, 4~7 구간을 중간층, 그리고 8~10 구간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자의적이다.[1] 더욱이 여기에는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즉, 가구 구성원들의 임금을 포함한 소득을 모두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정확히 알더라도 진실된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객관적인 소득 분포 상의 위치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perception)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간 구간인 것으로 보고하려는 심리적 편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자료의 제약 때문에 위의 문항을 사용하여 소득층을 측정한다. 한국 응답자들의 19.8%가 저소득층, 7.4%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 반면에, 무려 72.9%가 중간층으로 분류되었다. 일본 응답자의 경우, 53.8%가 저소득층, 15.2%가 고소득층, 그리고 31%가 중간층으로 분류되었다. 대만은 응답자의 23%가 저소득층, 3.4%가 고소득층, 그리고 73.6%가 중간층으로 분류되었다. 한국과 대만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중간층으로 인지하거나 그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일본 응답자들은 저소득층으로 스스로 인지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 가구 소득 구간 문항에 대한 응답을 1~2 저소득층, 3~8 중간층, 그리고 9~10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도 아래에 보고되는 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동아시아 국가 저소득층/고소득층 복지/재분배 태도 비교

	사회 보호 지지 비율(%)		재분배 지지 비율(%)	
	저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한국	85.6	76.7	34.3	17.1
일본	82.3	76.4	64.2	43.2
대만	62.4	42.5	49.0	37.5

자료: Inglehart et al.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Six* (Madrid: JD Systems Institute).

표 2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복지 태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 보호와 재분배 모두 저소득층의 지지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사회 보호 선호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저소득층-고소득층 선호 격차가 9%(한국)와 6%(일본) 정도인 반면에, 대만은 무려 약 20%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분배 선호의 저소득층-고소득층 격차는 대만이 가장 작고, 일본은 약 20% 정도의 차이를 보인 반면에, 한국은 두 배의 차이(34.3% 대 17.1%)를 보였다. 대만이 사회 보호 선호의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면, 한국은 재분배 선호의 계층 간 양극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을 사용한다.: "다음의 이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보통 더 나은 상황을 가져온다(운이나 연줄이 아니라)." 응답은 1~10의 10점 척도로 표시되었다. 사실, 이 문항을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더 나은 경제적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 노력이냐 운이냐에 대한 질문은,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 변수로 정치적 이념 성향(1(진보)~10(보수)), 성별(남성=1), 연령, 교육 수준(7개 구간 척도)을 포함한다. 또한 동아시아 3개국을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pooling), 각 국가 간의 고유한 고정 효과를 포착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더미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

IV.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경험적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다음 소절에서는 세계 가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아시아 바로미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1. 세계가치조사 자료 분석

표 3은 동아시아 3국의 시민들의 사회 보호 선호와 재분배 선호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형 (1)과 모형 (3)은 소득 계층과 계층 이동성 인식의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모형 (2)와 모형 (4)는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 것이다. 종속 변수는 1~10의 척도로 측정된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OLS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이 중간층에 비해 사회 보호와 재분배를 뚜렷하게 지지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결과는 99%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사회 보호 선호는 중간층에 비해 뚜렷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듯이, 고소득층이 중간층에 비해 뚜렷하게 재분배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관심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는 계층 이동성 변수의 추정 계수 방향을 통해 나타난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분배 선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4)까지 계층 이동성 변수의 추정 계수는 모두 99%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 보호 선호가 0.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재분배 선호가 0.0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의 가설에 부합한 결과이다. 모네와 월러슈타인(2003)의 이론적 주장을 미래 소득 또는 미래 시점의 계층 이동 인식의 관점에서 확대하여 보았을 때,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상재(normal good: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표 3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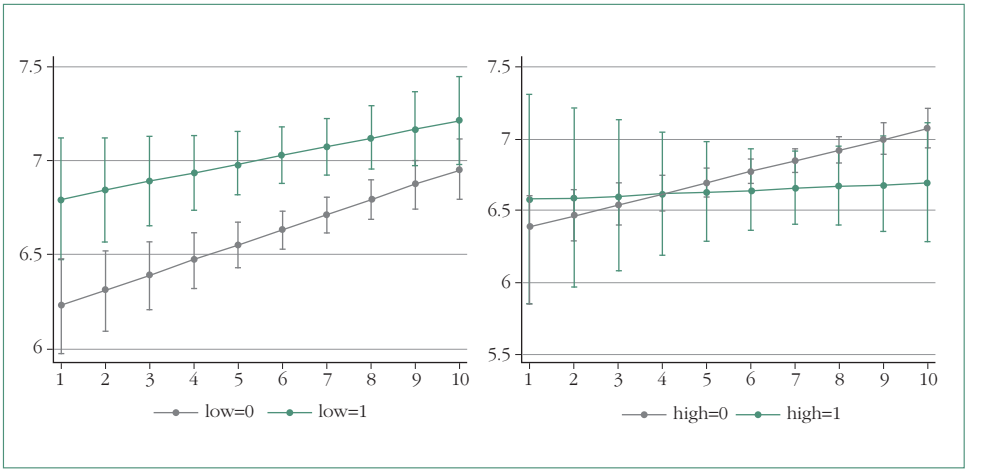
	사회 보호 선호		재분배 선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저소득층	0.376** (0.094)	0.606** (0.243)	0.225** (0.093)	0.078 (0.242)
고소득층	-0.192 (0.139)	0.248 (0.445)	-0.623** (0.137)	-0.628 (0.439)
계층 이동성	0.069** (0.016)	0.087** (0.022)	-0.060** (0.016)	-0.069** (0.021)
저소득층*계층 이동성	-	-0.035 (0.034)	-	0.022 (0.034)
고소득층*계층 이동성	-	-0.062 (0.060)	-	0.001 (0.059)
정치적 이념 성향	-0.123** (0.020)	-0.123** (0.020)	-0.123** (0.020)	-0.123** (0.020)
성별(남성)	-0.207** (0.078)	-0.207** (0.078)	-0.122 (0.078)	-0.121 (0.078)
연령	-0.004 (0.003)	-0.004 (0.003)	0.008** (0.003)	0.008** (0.003)
교육 수준	-0.065** (0.023)	-0.065** (0.023)	-0.006 (0.023)	-0.005 (0.023)
한국	2.014** (0.101)	2.016** (0.101)	-0.369** (0.100)	-0.369** (0.100)
일본	1.644** (0.105)	1.641** (0.105)	0.684** (0.104)	0.685** (0.104)
상수	5.001** (0.304)	4.885** (0.318)	4.437** (0.302)	4.491** (0.316)
Adjusted R^2	0.117	0.117	0.062	0.061
N	3715	3715	3695	3695

주: OLS 추정 계수와 표준 오차. * p<0.05, ** p<0.01.

증가하는 재화)의 특성을 갖는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등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반대로, 노력을 통한 계층 상향 이동과 미래 소득의 증가에 대한 예측은 현시점에서 재분배 선호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아시아 3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에 조응하는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통제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 보호 선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이념 성향이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결되는 반면에, 남성의 낮은 사회 보호 선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재분배 선호는 여성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 수준은 사회 보호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재분배 선호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소득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사회 보호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 수준과 재분배 선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교육의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cancel out)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교육이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배우게



주: 왼쪽 패널의 위 실선은 저소득층, 아래쪽은 중간층+고소득층을 나타낸다. 오른쪽 패널의 평행한 실선은 고소득층, 상향 실선은 저소득층+중간층을 나타낸다. 세로 선은 95% 신뢰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x-축은 계층 이동성에 관한 인식, y-축은 사회 보호 예측 선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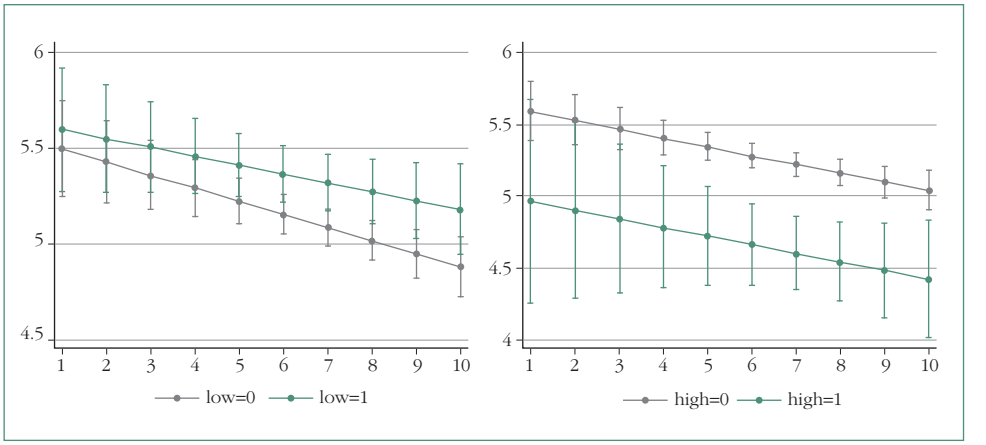
그림 1 계층 이동성 인식이 사회 보호 선호에 미치는 효과

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그리고 고소득층과 계층 이동성 인식의 상호 작용항을 포함한 분석 결과, 상호 작용항 그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 작용항의 추정 계수만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림 1은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사회 보호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하여 한계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1의 왼쪽 패널은 저소득층과 중간층-고소득층을 구분한 것이고, 오른쪽 패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중간층으로 구분한 것이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증가할 때 사회 보호 선호의 예측 값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왼쪽 패널에서 잘 보여 주듯, 저소득층(위의 실선)과 중간층-고소득층(아래 실선)의 차이는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2~8 사이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중간층-고소득층의 계층 이동성 인식이 9 이상으로 높아질 때 저소득층과 중간층-고소득층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사회 보호 선호 예측 값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그러나 오른쪽 패널처럼 소득 계층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중간계층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계층 이동성 인식과 사회 보호 선호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계층이 동성 인식의 효과는 저소득층과 중간층-고소득층의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림 2의 왼쪽 패널은 저소득층(위의 실선)과 중간층-고소득층(아래 실선)을 구분하여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1에서 10까지 변화할 때 재분배 선호의 예측 값을 표시한 것이다. x-축의 모든 구간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95% 신뢰 구간이 중첩됨). 다만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높을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아지는 하향 선형 관계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오른쪽 패널은 고소득층(아래 실선)과 저소득층-중간층(위의 실선)의 재분배 선호 예측 값을 계층 이동성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성 인식이 4 이상일 때 고소득층의 반(反)재분배 선호가 저소득층-중간층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노력에 의한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또는 기회 평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수록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는데,



주: 왼쪽 패널의 위 실선은 저소득층, 아래쪽은 중간층+고소득층을 나타낸다. 오른쪽 패널의 아래 실선은 고소득층, 위 실선은 저소득층+중간층을 나타낸다. 세로 선은 95% 신뢰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x-축은 계층 이동성에 관한 인식, y-축은 재분배 예측 선호를 나타낸다.

그림 2 계층 이동성 인식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효과

소득 계층 간의 뚜렷한 차이는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중간층 사이에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 준다.

2. 국가별 분석

앞에서 통합 자료(pooled data)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응답자들을 국가별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소득 계층과 계층 이동성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사회 보호 선호와 재분배 선호 두 종속 변수에 대하여 회귀 분석하였다.[2]

표 4는 국가별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저소득층이 중간층에 비해 사회 보호 선호가 뚜렷하게 차이 나는 패턴은 한국과 대만에서 발견되었다. 저소득층의 재분배 선호는 일본과 대만에서 중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이 중간층에 비해 낮은 재분배 선호와 연관되는 패턴은 한국과

2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 대한 분석도 앞의 표 3과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표 4 한국, 일본, 대만의 사회 보호 및 재분배 선호 결정 요인

	한국		일본		대만	
	사회 보호	재분배	사회 보호	재분배	사회 보호	재분배
저소득층	0.349** (0.159)	-0.104 (0.177)	0.210 (0.135)	0.270** (0.123)	0.667** (0.210)	0.490** (0.204)
고소득층	-0.090 (0.242)	-0.607** (0.265)	-0.305* (0.177)	-0.633** (0.161)	-0.507 (0.443)	-0.582 (0.432)
계층 이동성	0.108** (0.025)	-0.171** (0.027)	0.034 (0.027)	-0.046* (0.024)	0.050 (0.033)	0.045 (0.032)
정치적 이념 성향	-0.151** (0.031)	-0.145** (0.034)	-0.123** (0.032)	-0.141** (0.029)	-0.084* (0.044)	-0.080* (0.043)
성별(남성)	-0.170 (0.125)	-0.021 (0.138)	-0.282** (0.120)	-0.333** (0.109)	-0.225 (0.165)	0.055 (0.161)
연령	-0.005 (0.005)	0.016** (0.006)	-0.011** (0.004)	0.002 (0.004)	0.009 (0.006)	0.009 (0.006)
교육 수준	0.032 (0.045)	0.039 (0.050)	-0.060* (0.036)	-0.037 (0.033)	-0.091** (0.044)	0.018 (0.043)
상수	5.878** (0.567)	4.018** (0.630)	7,345** (0.440)	5.552** (0.400)	4.959** (0.609)	3.643** (0.594)
Adjusted R^2	0.039	0.049	0.024	0.049	0.031	0.010
N	1184	1189	1437	1415	1094	1091

주: OLS 추정 계수와 표준 오차. * p<0.05, ** p<0.01.

일본 응답자들에게서 발견되었으나, 대만 응답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 사회 보호 선호와 재분배 선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이론적 주장과 통합 자료 분석에서 제시된 경험적 발견은 한국 응답자들에게서만 뚜렷한 패턴을 보이면서 보고되었다. 즉, 한국 응답자들은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 보호 선호와 낮은 수준의 재분배 선호와 연계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앞에서 통합 자료 분석 결과에서 보고된 이러한 패턴은 사실 한국 자료로부터 상당 부분 추동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념 성향은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일관된 패턴으로 보고되었다. 다시 말해,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사회 보호와 재분배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방향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시민들의 복지 태도 또는 복지 및 재분배 선호가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 이념 성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성별의 영향은 일본의 경우에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만과 일본의 자료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낮은 수준의 사회 보호 선호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3. 아시아 바로미터 자료 분석

여기에서는 앞에서 세계가치조사 6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의 강건성 검증의 하나로서,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는 한국에서 2015년에 1,200명, 대만에서 2015년에 1,657명, 일본에서 2016년에 1,081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가 시행되었다. 한국, 대만, 일본의 통합 자료(pooled data)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 변수는 재분배 선호이다. 재분배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반대’까지 4점 척도로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우리는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하여 1로, ‘매우 반대’와 ‘반대’를 합하여 0으로 코딩하여, 재분배 선호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를 모델의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아쉽게도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에는 사회 보험이나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분배 선호만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의 독립 변수인 소득 계층은 가구 소득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가구 소득이 하위 20%에 속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상위 20%에 속할 경우 고소득층으로, 나머지 경우는 중간소득층으로 코딩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독립 변수인 사회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감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몇 년 후에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매우 좋아질 것이다’부터 ‘매우 나빠질 것이다’까지 5점 척도로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를 5로, ‘매우 나빠질 것이다’를 1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표 5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재분배 선호 결정 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저소득층	0.029 (0.126)	0.069 (0.132)	-0.049 (0.433)
고소득층	-0.370** (0.130)	-0.348** (0.132)	-0.676 (0.533)
성별(남성)	-0.147 (0.093)	-0.147 (0.096)	-0.145 (0.096)
연령	0.018** (0.004)	0.016** (0.004)	0.016** (0.004)
교육 수준	0.073* (0.029)	0.074 (0.103)	0.074* (0.030)
고용 여부(고용인)	0.200* (0.100)	0.174 (0.103)	0.175 (0.103)
한국	-0.293** (0.108)	-0.322** (0.110)	-0.321** (0.110)
일본	-0.405** (0.127)	-0.446** (0.132)	-0.442** (0.132)
계층 이동성		-0.139* (0.058)	-0.163* (0.072)
저소득층*계층 이동성			0.039 (0.139)
고소득층*계층 이동성			0.102 (0.160)
상수	0.363 (0.324)	0.940* (0.395)	1.017* (0.419)
유사 R^2	0.014	0.015	0.015
N	3407	3274	3274

주: 로짓(logit) 추정 계수와 표준 오차. * p<0.05, ** p<0.01.
자료: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

큰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도 성별, 연령, 교육, 고용 여부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이 통제 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3] 성별은 남성일 경우 1로 코딩

3 아시아 바로미터 자료에 정치적 이념 성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분석 모형에는 포함시

되었으며, 고용 여부는 무직자일 경우 0으로, 직업이 있을 경우 1로 코딩되었다. 종속 변수가 재분배 선호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추정하였다. 표 5는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에 보고된 분석 결과가 제시하듯이, 저소득층은 중간층에 비해 뚜렷한 재분배 선호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이 중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재분배 선호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고소득층의 반(反)재분배 선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미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측정된 계층 이동성 인식은, 비록 앞의 세계 가치 조사 6차 조사의 문항과 정확히 일치하는 측정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앞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분배 선호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성 인식이나 미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나 모두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개인의 재분배 선호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기대 소득(expected income)과도 상당 부분 연관된다는 정치 경제학 논의들(Rueda and Stegmueller, 2019)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절에서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앞에서 세계 가치 조사 6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이 연구의 관심과 관련하여, 계층 이동성 인식이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은 서로 다른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는, 강건한(robust) 발견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V. 결론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경제적 낙관주의 및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복지 태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미래 소득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의 재분배 선호와 높은 수준의 사회 보호 선호와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

키지 않았다.

다. 또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분석을 하였을 때, 한국 응답자 샘플에 대한 분석에서가 장 뚜렷하게 우리의 이론적 주장과 유사한 양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소득 계층에 따라 복지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재분배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은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친 복지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층은 계층 이동성 인식과 상관없이 반 재분배 선호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3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의 선호 분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친 복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소득에 따른 정책 선호 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나는 발견이다. 이념 성향과 연령,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한 모형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저소득층의 친 복지 태도, 그리고 고소득층의 반 재분배 선호가 분명히 발견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에 대한 회의가 있고, 따라서 인과 추론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소득과 복지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가 복지 선호와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분석된 것은, 우리의 이론적 주장에서 제시했듯이, 사회 보호와 재분배의 특성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 있는 주장과 루에다와 슈테그뮬러(Rueda and Stegmueller, 2019)의 미래 기대 소득 효과를 결합한 주장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한편으로 개념 정의의 이슈(conceptual issue)와 변수 측정의 오류 가능성이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경제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사회 계층 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아울러 분석에 사용한 조사 문항들이 계층 이동성 개념에 대한 타당성 있는 측정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 더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측정을 통해 계층 이동성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론 조

사를 통한 가구 소득을 측정할 때에는 항상 측정 오류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수인 위험을 측정한 변수가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약이 있다. 직업군의 실업률(Rehm, 2016)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Alt and Iversen, 2017) 등의 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의 국가 간 차이(cross-national variations)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비교사적 접근과 결합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더 심층적인 비교사적 연구와 결합하여,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 제도나 노동 시장 제도, 그리고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의 특성 등의 제도적 맥락(Chang et al., 2010)이 동아시아 세 나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

투고일: 2019년 6월 10일 | 심사일: 2019년 6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 문헌

권혁용. 2017.『선거와 복지국가』. 서울: 고려대출판문화원.

권혁용. 2019.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와 내부자-외부자 정치경제학.”『한국정당학회보』18권 1호: 103-135.

김항기·권혁용. 2017.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 태도.”『한국정치학회보』51권 1호: 261-285.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 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91호: 211-240.

이주희. 2014. “세대별 고용 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경제와사회』103호: 129-165.

이철승·황인혜·임현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자산 불평등, 보험 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한국정치학회보』52권 5호: 1-30.

Alesina, Alberto, and Edward La Ferrara.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 897-931.

Alt, James, and Torben Iversen. 2017. "Inequality,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21-36.

Benabou, Roland, and Efe A. Ok.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Chang, Eric, Mark Kayser, Drew Linzer, and Ronald Rogowski. 2010. *Electoral Systems and the Balance of Consumer-Producer Pow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mick, Matthew, David Rueda, and Daniel Stegmueller. 2018. "Models of Other-Regarding Preferences,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441-460.

Finserras, Henning. 2009. "Income Inequality and Demand for Redistribut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1): 94-119.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and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2010-2014*. Madrid: JD Systems Institute. Version: 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Iversen, Torben and David Soskice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3.

Meltzer, Allan, and Scott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14-927.

Moene, Karl Ove, and Michael Wallerstein. 2001.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59-874.

Moene, Karl Ove, and Michael Wallerstein. 2003. "Earnings Inequality and Welfare Spending: A Disaggregated Analysis." *World Politics* 55(4): 485-516.

Mosimann, Nadja, and Jonas Pontusson. 2017. "Solidaristic Unionism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Europe." *World Politics* 69(3): 448-492.

Rehm, Philipp. 2016.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mer, Thomas. 1975. "Individual Welfare, Majority Voting and the Properties of a Linear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2): 163-185.

Rueda, David, and Daniel Stegmueller. 2016. "The Externalities of Inequality: Fear of Crime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Western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2): 472-489.

Rueda, David, and Daniel Stegmueller. 2019. *Who Wants What? Redistribution Preferenc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ayo, Moses. 2009.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2): 147-174.

Abstract

Economic Optimism and Welfare Attitudes: The Case of East Asian Democracies

Hyeok Yong Kwon Korea University
Jennifer Hyunkyung Lee University of Arizona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among citizens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effect of the prospect of social mobility and opt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on welfare attitudes. Our study combines the insights of Moene and Wallerstein (2001, 2003) with the impact of the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We argue that economic optimism about future incom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distribution preferences, while 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We expect that this pattern is not dependent upon income clas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World Values Survey Wave 6 and Asia Barometer Wave 4, finds supporting evidence .

Keywords | Welfare Attitude, Redistribution Preferences, Social Mobility, East Asia, Political Economy